

5·18 성폭력 피해자·수배·연행·구금자 보상 길 열렸다

5·18 유공자 예우법·보상법 국회 통과 ... 현안 입법 사실상 마무리 희생자의 형제·자매들 공법단체 회원 가능 ... 해직 언론인들도 보상

5·18 민주화운동 41년 만에 진실 규명과 역사왜곡 처벌, 유공자 예우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살인마' 전두환의 재판이 5월 추모 기간 동안 광주에서 열리지만 여전히 전두환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자의 부끄러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진상조사위를 통해 발표명령자와 암매장 등의 진실에 다가서고 있지만 넘어야 할 벽이 높기만 하다.

'호남 동행'을 외치며 광주에 제2 지역구를 정하고 국회의원을 배정했던 국민의힘도 정작 오월 관련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월 관련 법안 처리와 후속 작업 과정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들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자, 수

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이고 강제 해직된 '80년 해직 언론인'들도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0년 해직 언론인 및 유족은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고,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앞서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과 왜곡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월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상규명위원회 연장 등)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률안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5·18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하루 13명 꼴 확진 ... 특별 방역주간 1주일 연장 전남, '다중시설 1업소 1명 검사' ... 6인 모임 3주 연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주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는 학원가 밀집지역인 봉선동 일대 학교 3곳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남에선 동부권 등을 중심으로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 김중호 행정부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주일간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평균 13.4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24일부터 30일까지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주부터 시행 중인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골라텍·헌팅포차·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타디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을 1주일 연장한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제한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이달 들어 하루 두 자릿수 확진이 지속되자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특별방역주간으로 운영했다. 이 기간 유

형시설과 식당·카페,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위반 사례 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건, 행정지도 90건의 조치를 했다. 김 부시장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자리로 줄어드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식당·카페·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업소, 1명 검사받기, 도내 외국인 진단검사 강화, 유흥시설 관계자 주 1회 진단검사, 경찰 합동 특별합동점검 등 대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1명 검사는 물론 자가격리 비용과 입원치료비용도 지원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으로 방역은 강화하되,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여수·순천·광양을 제외한 19개 시·군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전남도는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판문점선언 기초... 대화 통한 비핵화 합의

문 대통령-바이든 한미정상회담 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등을 바탕으로 한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북 접근법의 완전한 일차'를 위해 조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 전문가인 성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발전시켜 나갈 대북 정책의 '토대'로, 북미 정상 간 합의인 싱가포르 공동성명 외에도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연합뉴스

전남 골프장 요금 인상 횡포 ... 고객은 붐? ▶6면

코로나 시대 안심 여행지 - 해남 달마고도 ▶11면

추락하는 KIA·폴씨 광주FC 팬들은 허탈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yonhapnews.co.kr

한 해의 모든 뉴스·시사 자료가 한권에...
'연합연감 2021'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21년판이 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명의 전문 필진이 제작한 올해 연합연감은 2020년 한 해의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핵심뉴스로 뽑은 '초집'으로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례 없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속에 치러진 '4·15 총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秋-尹 갈등', 박원순 국대 선택과 오거돈 사퇴로 이어진 정치권 미투 파문,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과 전세난 등을 다뤘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안을 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 등극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석권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분야별 뉴스는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보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또 주요 사건·사고를 일지로 요약, 정리했으며 국내외 및 북한의 주요 뉴스를 확보로 묶었습니다. 각종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와 함께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는 통계, 일림,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을 수록했으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즈음해 그간 경과와 피해 상황, 향후 전망과 대비책 등을 조명한 기획기사 '코로나19 1년을 돌아보다'와 최근 10년간 연합뉴스 선정 국내·국외 10대 뉴스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남북관계 최악의 긴장국면을 초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 그리고 '노동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 등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참조해 분석,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행정구역별 지도와 함께 나열한 시·도 지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및 각종 명화,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북한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을 소개해 자료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1981년부터 연감 제작을 시작해 올해로 통권 41권을 발간했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376쪽
■ 가격: 18만원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경기(031)238-2222 경기북·강원(031)569-7788 인천(032)427-1236 대전·충청(042)521-9705 광주(062)264-5777 경남(055)281-0010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